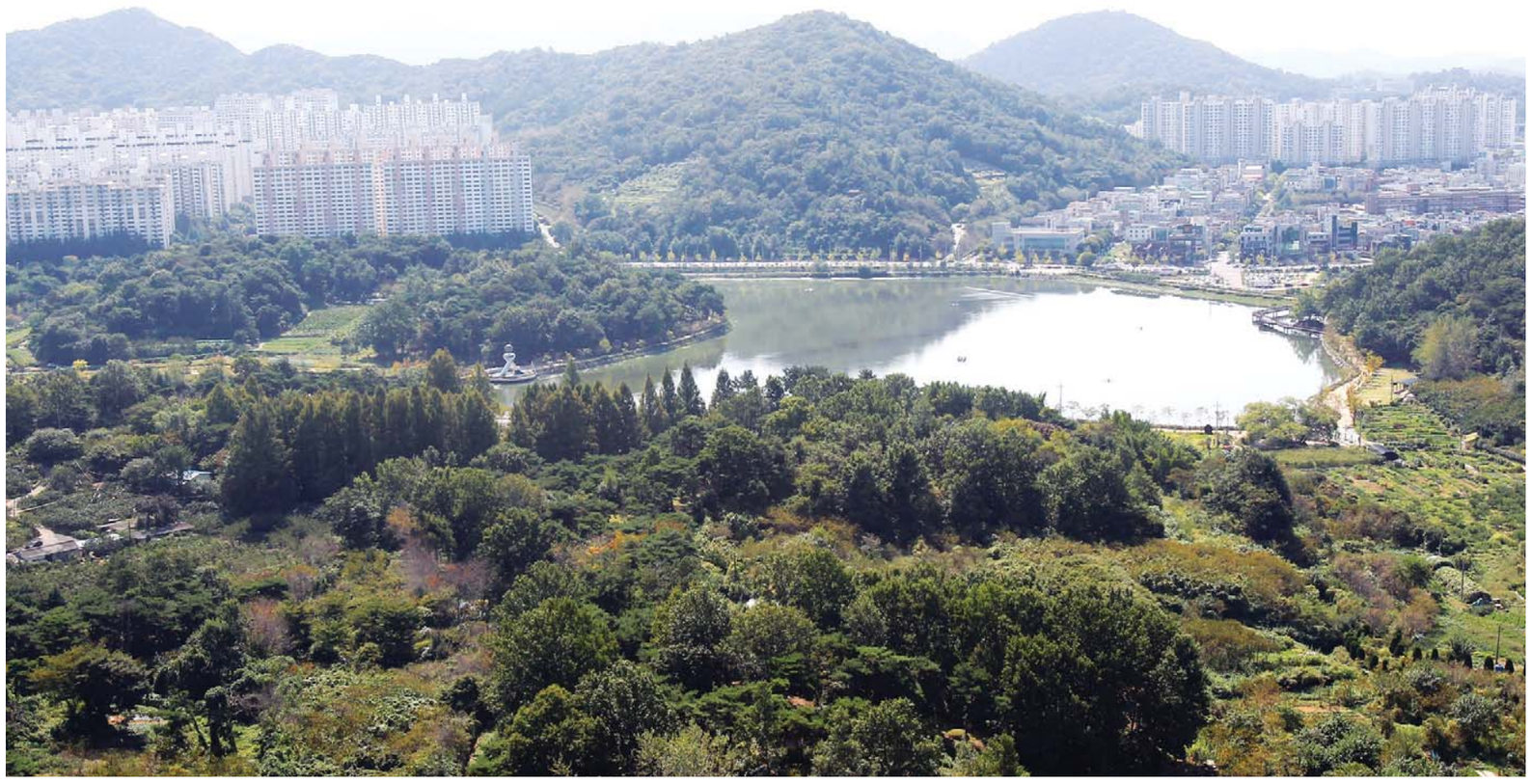
민간공원 2단계, 평가 오류·심사표 사전 유출로 먹칠

공원 보존해야할 공원녹지과에 개발사업 맡겨 태생적 한계
과다 업무·잦은 인사 속 업체 경쟁 과열로 정보·문서 유출
공정성·형평성 논란도 제기…업체들 "소명기회 주어져야"



광주시가 13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와 관련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제안서 평가심사표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받아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없었으며, 시 감사위가 이례적으로 정량평가 점수를 매겨 제안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 논란이 커지고 있다. 중앙공원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개발업체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으로 민관거버넌스를 구성해 개발 면적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인 30% 미만보다 크게 줄이고, 시민 참여 비율을 높이는 등 앞선 행정으로 호평을 받았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담당 부서의 과오와 제안서 평가심사표의 사전유출, 그리고 탈락업체들의 반발로 시작된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전문성,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시 감사위가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량평가의 점수까지 매기면서 감사가 주요 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주안점을 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시 감사위는 정작 중요한 '제안서 평가심사표의 사전 유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안을 내놓지 못했다.

시정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 감사위가 행정 전면에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모사업에 있어 시 감사위의 검증단을 거치게 한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옥상옥'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불안 요소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난해 1단계 사업부터 상당한 불안요소를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시민들의 공공자산인 도시공원에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하는 공원개발사업을 공원 보존이 목적인 공원녹지과에 맡긴 것부터가 문제였다. 건축주택과, 도시계획과 등 개발 행정의 노하우가 있는 실과와의 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2020년 하반기 도시공원 해제 시기에 맞춰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업무량이 폭주했으며, 평가 과정을 비공개한 것도 업체들의 불만을 샀다. 탈락업체들이 탈락 사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반발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광주지역 내 아파트 부지가 거의 소진되면서 공원 개발을 노리고 있던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은 공정한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할 광주시에서의 정보나 문서의 외부 유출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격무로 인해 실무자, 팀장, 과장 등이 수시로 바뀌면서 업무의 연속성도 기할 수 없었다.

◇시한 얽매이기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행정 펴야=광주시는 2020년 하반기까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재공모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시 감사위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량평가를 재산정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제안서를 제출한 5개 공원 6개 지구 15개 업체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를 재선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는 또다른 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월 16일부터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비전문가로 구성된 시 감사위가 채점한 내용을 업체는 물론 제안심사위원회 전문가들조차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감사결과와 같이 드러난 문제점이 심각하다면 이를 수정해 재공모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시 감사위가 제안서 모집공고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어겼다고 하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안이 아니며, 광주시가 재량에 의해 정한 것"이라며 "모집공고가 잘못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업체들이 혼선을 초래했다면 재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기가 촉박하다는 이유로 공정성, 형평성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또 제안심사위원회가 다시 열린다면 감사위의 감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가들이 판단하도록 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한을 정해 미리 결론을 내놓고 '밀어부치기식 행정'을 해서는 행정의 불신만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가 서둘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1단계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똑같은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른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면 그 자체가 행정의 일관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전남 지자체 대북사업 줄줄이 스톱

北 예술단 공연·광주수영대회 참가
시·도 연내 방북 무산으로 불투명

미·러 정상회담, 김정은의 서울 답방 등이 늦춰지면서 광주·전남 지자체들의 남북교류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올 해 북한을 찾아 다양한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정세 변화에 따라 북한 방문이 올해에는 어려워졌다.

13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달과 이번 달 예정됐던 북한 방문을 내년 초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북한 예술단의 광주 공연, 내년 광주세계수영대회 선수단 참가, 농수축산분야 기술 전수 등 교류 사업 추진이 불투명해졌다.

광주시·전남도는 수개월 전부터 지속해서 방북 의사를 북에 전달했지만 이날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통일부 승인, 항공 예약 등 사전 절차 등을 고려하면 방북까지 1주일 정도 준비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올해 방북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등 국내외 여러 일정을 고려하면 내년 2월 이후부터 방북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내년 3월께 다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방북이 무산되면서 추진 중인 교류협력 사업도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가 유치를 추진 중인 북한 예술단의 '가을이 왔다' 공연은 현재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태다. 남북은 10월 북한 예술단의 서울 공연을 추진했으나 북한에서 별다른 반응이 없어 미뤄지고 있다. 북한 선수단, 응원단, 공연단의 광주세계수영대회 참가도 불투명해졌다. 광주시는 수영선수단 임시 엔트리 제출 시한인 내년 4월 이전까지 방북해 협의를 끝낼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 2008년 평양에 준공한 발효 콩 빵 1공장, 2010년 천안함 격침사건 이후 중단된 2공장 사업 등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농업박람회에서 북한 식품 홍보·판매, 농업기술,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정세 변화를 보고 내년에 다시 방북 일정을 잡아 수영대회 참가 여부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균형발전 우선 고려"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이르면 내달 중순 선정 가능"

국가균형발전위는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 각 시·도별로 추천한 사업을 우선 검토하는 한편,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선정도 검토하고 있다. 또 균형발전차원에서 특정 시·도에 국한된 사업보다 여러 시·도에 연결된 사업을, SOC 구축보다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혁신에 연관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예타 면제 사업 발표 시기와 관련, "당정협의와 시·도지사 협의, 국무회의 등을 고려하면 1월 중순이나 말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어 "각 시·도는 1개 이상의 예타 면제 사업을 기대하고 있으나 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법적인 기준 등에 따라 정부와 기재부의 생각은 다르다"며 사업 선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은 지역별 형평성이 아니라 균형발전의 의미를 고려해야 하며, 각 시도당 하나씩 나눠먹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가치를 고려해서 선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은 시·도의 의견을 우선 수렴할 계획이지만 시·도가 신청하지 않았어도 균형발전의 가치가 높고, 경제 발전에 기여될 사업이 있다면 이를 선정할 수도 있다"며 "이 같은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 선정 기준과 관련 "예타할 수 있는 경우가 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할 것이며, 지역은 0.7 정도면 잘 나오는 것이니 이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 송 위원장은 "기존 혁신도시에 대해 점검 및 평가, 보완점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추가 혁신도시 지정 및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선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전공대 설립 지원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위원장은 "한전 공대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게 되지만, 국립대학이 되기는 힘들고, 법적으로는 사립대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한전의 부지 선정 등이 이뤄지면 1월말에 2차 지원위원회 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한국어촌어항공단에서 주관하는 2018년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 『친환경양식 ONE-STOP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어촌어항공단 이사장

친환경기술이전사업 모니터링업체 모집

1. 모집업체 30개소(이내)

2. 신청자격
- 2017년, 2018년 친환경기술이전교육을 수료하고 양식을 창업한 자(업체)
- 바이오플락 방법으로 새우 등을 양식하고 있는 자(업체)

3.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8. 11. 27. ~ 12. 1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남/전남 어촌특화지원센터
- 대상업체 선정 : 2018.12. 17 ~ 21(개별통지)

4.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5. 모니터링 대상 업체선정 및 모니터링 횟수
-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선정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개별 통지
- 모니터링 횟수는 총 4회(이내)이며 지원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6. 일정 및 방법
- 일정 : 2018. 12. ~ 2019. 3.
- 방법 : 매월 1회 전문가 업체 방문

친환경양식 ONE-STOP 창업지원 사업 컨설팅 대상자 모집

1. 모집분야 5개분야/ 250명
- 양식창업·경영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 생산기술 컨설팅 지원
- 친환경 양식 시설 컨설팅 지원
- 행정 서비스 지원(인·허가사항)
- 수산물 유통 컨설팅 지원 ※ 최대 4회 신청 가능/중복신청 제한

2. 신청자격
- 예비양식창업자 및 창업희망자
- 수산업종사자 또는 경영자
- 2018년 친환경양식기술이전교육 수료자 등

3. 지원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접수)기간 : **2018. 11. 27. ~ 12. 14**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경남/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 교육생선발 : 2018.12. 17 ~ 21 (개별통지)

4. 제출서류 및 선발
- 지원 신청서(사진 3×4cm부착)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제출한 지원서를 교육생 선발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발 개별 통지

5. 컨설팅 품종 10대 전략품종(해수부지정)
- 품종 : 새우, 민물장어, 관상어, 전복, 해조류, 능성어, 해삼, 넙치, 갯벌참굴, 참다랑어

6. 컨설팅 지원 방법 및 장소/일정
- 지원방법
  - 신청자가 분야별 컨설턴트를 지정 신청하면 1:1 맞춤형 컨설팅지원
  - 1인 최대 4개 분야(4회) 신청 가능
  - 컨설턴트 별 1회 이상 중복 신청 불가
- 컨설팅 장소 :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컨설팅 일정 : 2018. 12. 24~ 2019. 2. 28

문의처 |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경상남도 통영시 통영해안로 234 통영항 여객선터미널 201호 ☎ 055) 642-5762 · 이메일 : ksh040@fipa.or.kr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빌딩 10층 ☎ 062) 220-0588 · 이메일 : yys1318@hanmail.net

※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 및 유의사항은 포털사이트에서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홈페이지 검색 후 공지사항에서 필히 확인바랍니다.